

박용근 전북자치도의원, 하반기 의장 출마 선언

“의원 정책보좌관제 만들 것”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하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된 박용근 의원(3선, 장수군)이 3일 오전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자치도의회가 되었으니 대한민국 최초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보좌관제를 만들어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방행정공제회처럼 지방의원 공제회를 만들어 의원들의 복지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사업인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대도시 광역교통망법 제정, 공공의대 설립 등의 해결을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서 노력해 도민들에게 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공조와 협조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강력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여 확실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3일 오전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전북지역 여성사 지원 조례 추진에 따라 전북에서 활발히 활동한 여성들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유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전북자치도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에 23.81%보다 0.3% 떨어졌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박 의원은 도의장 출마 의원 중에서 자신이 3선 의원으로 재임 선수가 높고 산업자원부장관 정책보좌관과 예산기획처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쌓은 중앙 정치권과의 인맥을 적극 활용해 전북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복지 위해 지방의원공제회 조성 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 해결 위해 의회가 앞장서야”

이어서 자신이 의장이 되면 전북자치도의회, 전북자치도청과 중앙정치권이 서로 합심해서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겨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북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재와 소통의 역할을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정례회 오늘 개최

5·7일 도정·학예행정 질문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결의
2023회계연도 결산 등 처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는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제41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도정 및 교육청 결산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 16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일과 7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의 의안을 상임위원회로 심사한 뒤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려 촉구 건의안”과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5일 이수진(비례)·염영선(정읍2)·이병철(전주7)·오은미(순창)·장연국(비례) 의원이, 7일은 김승지(비례)·오현숙(비례)·윤정훈(무주)·서난이(전주9)·이병연(전주10)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

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현안에 대해 질문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지난해 수입과 지출 및 예비비지출의 적법·타당성을 심의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를 열어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11일까지 부처진 각종 안건(조례안 34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및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결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 뒤 제41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동료의원들에게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 2년 동안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준데 감사 드린다.”라고 말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도정질문과 꼼꼼한 결산 심의로 각종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도민의 열세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이성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 이성윤 의원,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대표발의

“검찰 수사 의혹 특검이 공정 수사해야”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차원에서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은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조작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성윤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차원에서 공동으로 준비한 법안으로 (취생방을 전 회장 김성태의 대북송금 및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들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은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이화영에게 접촉해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말을 하는 등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취생방울)의 직원이 수원지검 안에서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금지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3일 오전 11시 20분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11시 40분 국회 소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성윤 의원은 “오늘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안전하게 뿌리 뽑고, 사법 정의 실현하기 위해 이번 특검을 꼭 관철하도록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만호 기자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10월 15일까지 운영

전북자치도, 이상 기온·폭염 등 발생 대비

전북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 태풍 등 대표적인 여름 재해 외에도 이상 기온, 폭염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비해 감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으며, 폭염을 동반한 무더운 날씨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이 머무는 시간이 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도내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시·군, 유관기관도 비상체제로 전환해 상황 중

로시 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피해 상황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최근 3년간 피해가 있었거나 재해에 취약한 시설하우스 및 과수원 493개소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지주시설 결박상태, 경사지 피해 상태 등을 점검, 보완해 꼼꼼한 재해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여름 기간 예상치 못한 재해 피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제2차 통합방위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회의 의장인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4년 제2차 통합방위회의 및 화랑훈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35사단장, 전북경찰청장 등 통합방위위원, 제2작전사령부, 군, 경찰, 시·군, 유관기관 등 통합방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에 개최 예정인 화랑훈련을 주제로, 제2작전사령부의 △화랑훈련 통제 및 평가계획에 이어 기관별로 △35사단의 화랑훈련 준비계획 및 협조사항, △도의 화랑훈련 준비상황, △경찰의 통합방위 사태 시 경찰작전 수행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규모 훈련을 앞둔 상황에서, 항상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여기까지 모든 분들에게는 도민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화랑훈련’은 오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북 전 지역에서 진행되며, 후방지역에 대한 전·평시 연계된 작전 시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만호 기자

도, 지방세 체납자 건설업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추심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조합원이 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로, 조합원들의 보증 배상책임 손해공제와 같은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르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은 압류가 가능하고,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로 공매가 가능하다. 이에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조회하고 압류를 추심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절차는 도가 시군에 지방세정보 시스템으로 자료를 의뢰하고, 시스템으로 자료통보가 되면, 일괄 압류명령을 한다. 이후 시군은 공제조합으로 인도명령 후 출자증권을 점유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중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현장 애로 청취

최형열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이 지난날 31일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중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자치도청 물동합관리과, 전주시 안전정책과, 삼천3동 관계자, 하봉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중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공사비 84억7,800만원, 공사구간 L=2.9km, 교량 7개소로 201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 지난 4월 준공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관계자로부터 민원 현황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 후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하봉마을 주민들은 “일부 교량은 2톤 이상 차량이 좌·우회전을 하기에 폭이 너무 좁아서 위험하며, 일부 보행자 통행로 구간에 농사를 짓기 위해 하천을 내려가는 계단 통로가 너무 위험하다”며 시설 보완을 요청했다. /이만호 기자



이에 최형열 의원은 “일부 교량 가각정비와 하천을 내려가는 계단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니, 해당 관계자와 시설 개선을 위해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천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안전관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농생명산업지구 경쟁력 강화

전북자치도, 예비신청 지구 실행계획 공유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 및 시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생명산업 예비신청 지구 실행계획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각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농생명산업지구 예비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 수립 추진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시군이 실행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농생명산업지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특화지구이다.

전북자치도가 시군으로부터 4월 말까지 신청받은 18개 예비신청 지구 중 실행계획이 총괄하게 수립된 4개 지구(△군산 국산 맥아 및 지역특산 주류산업 거점지구 △김제 농공산업 거점지구 △장수 저탄소 장수 한우 산업화벨트 지구 △순창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지구)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

또한, 도 담당 부서는 예비 신청지구 18개소에 대한 경쟁력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6월 말까지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

농생명산업지구에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가 마련한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추진계획’에 따라, 각 시군이 전문가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5년 단위 분야별 지구 실행계획을 수립해 7월 1일까지 도에 지구 신청을 해야 한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산업지구 위원회’를 구성해 신청받은 지구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워크숍이 각 시·군마다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충실하게 수립된 시군 실행계획을 반영한 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발전에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